

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23. 7. .

발 의 자 : 금광연·강성삼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축사에서 가축사육제한으로 「축산법」의 축산업을 할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.
- 나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축사의 토지거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축사에서 「축산법」규정의 ‘축산업’을 경영하여야 함.
- 다. 「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(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 등)를 일부 개정하여 토지거래가 가능토록 함.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8조(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) ②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예외 조항 8호에 ‘「축산법」규정에 따른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’ 신설
- 나. 부칙
 - 신설된 제8조②항 8호는 개정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,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에 대한 예외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<참 고>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1.>

1.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
 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 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수변구역
 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 5.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
-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(危害)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구역(이하 “가축사육제한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·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.